



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과제

2013년 5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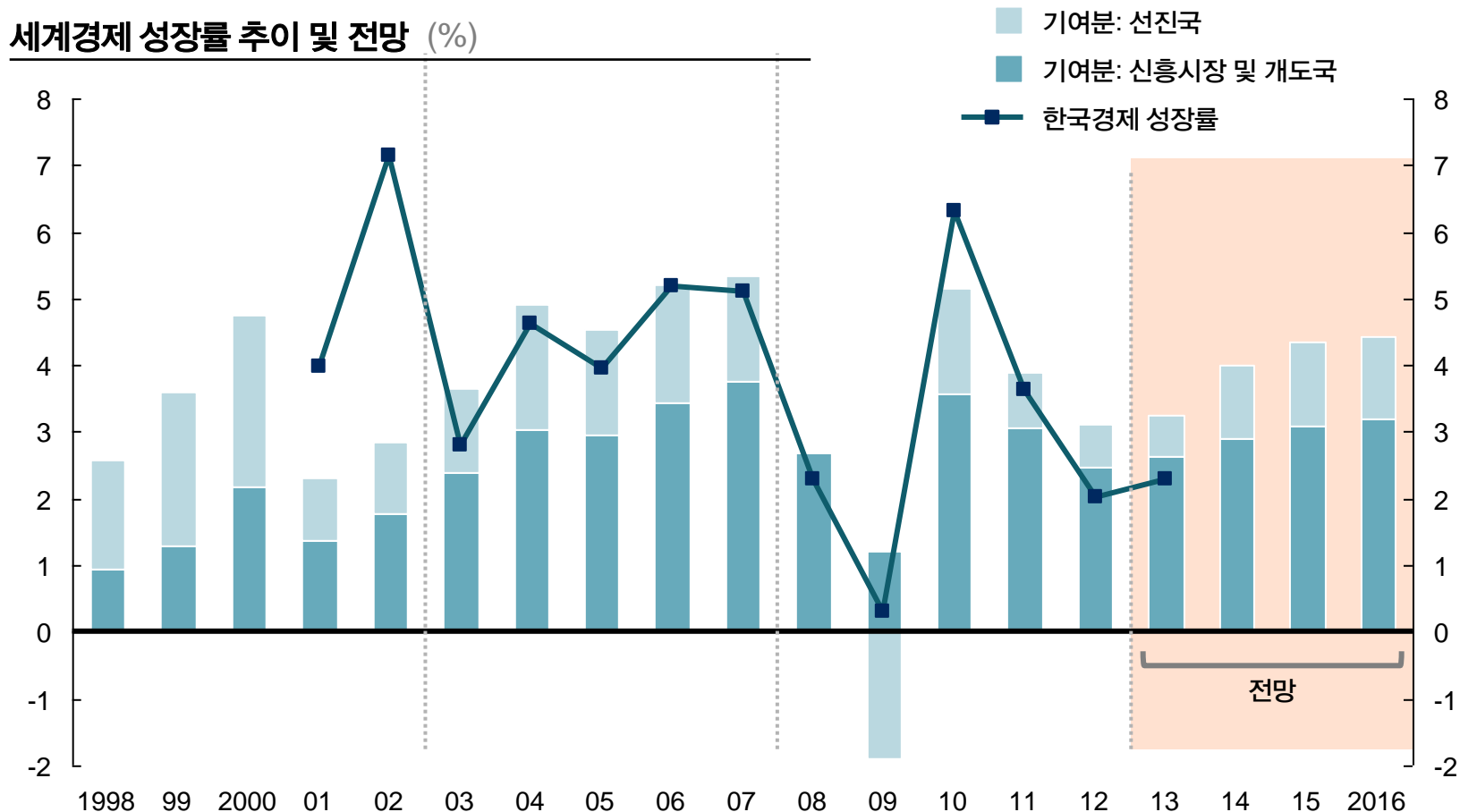
한국개발연구원 · 삼성경제연구소
골드만삭스 · 맥킨지

-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인식
 - 세계경제 환경
 -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
- 향후 정책 과제
- [참고] 새 정부 출범 후 주요경제정책과 경제 동향

세계경제는 점진적 회복 추세에 진입

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대응,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

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(%)



그러나, 대외적 위험 요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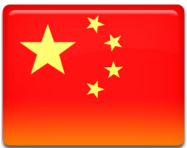
대외적 위험 요인



- 연말에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가능성
- 금리 인상 늦어도 2015-16년초 전망



- 엔저 및 양적완화 지속의 부작용
- 재정위기 우려 (예: 명목금리 상승으로 재정 급속 악화)



- 금융 건전성 하락과 지방재정 악화
- 투자에서 소비중심으로의 성장동력 교체의 지연/실패



- 경기침체 지속
- 유로권 통합 정책 불확실성 심화

한국 경제에 대한 잠재 위험 요소

- 양적완화 축소시 장기금리 상승전이
-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의 급격한 회수시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

- 아베노믹스 경기부양 실패시 엔저 심화 및 금융시장 불안
- 경기부양 성공시 물가/금리상승으로 일본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가능성

- 중국 거시경제 불균형 확대에 따른 위기 전이 가능성
- 한국 수출에 타격

- 세계경제 회복 지연
- 금융시장 불안, 변동성 증가 및 투자위축

반면, 중장기적 기회 요소도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음

30억명에 달하는 중산층 증가

- 2030년까지 중산층 30억명 증가
 - 1인당 GDP 6천불 이상 중산층 규모:
'12년 20억명 → '30년 50억명
 -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은 6천불 소득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
- 새롭게 등장하는 30억명의 소비자의 과반수가 아시아 신흥국에 거주

57조불 규모로 인프라 시장 확대

- 향후 2030년까지 57조불 규모의 인프라 시장 수요 예상
 - 선진국의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
 - 신흥국의 인프라 신규 건설수요
- 각국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증대 예상
 -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 한국기업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

이종 산업간 융합 트렌드

- 이종산업간 창조적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이 고부가가치화되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
 - 예: 자동차산업 + 엔터테인먼트 + 의료기술 → 차내에서 엔터테인먼트,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
- 후발국 추격에서 벗어나 우리산업을 차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기회로 활용

목차

-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인식

- 세계경제 환경

-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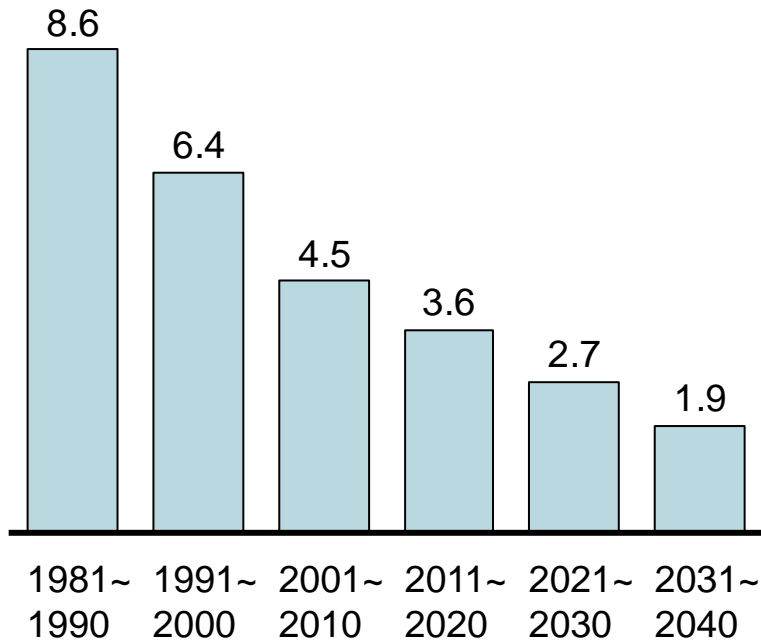
- 향후 정책 과제

- [참고] 새 정부 출범 후 주요경제정책과 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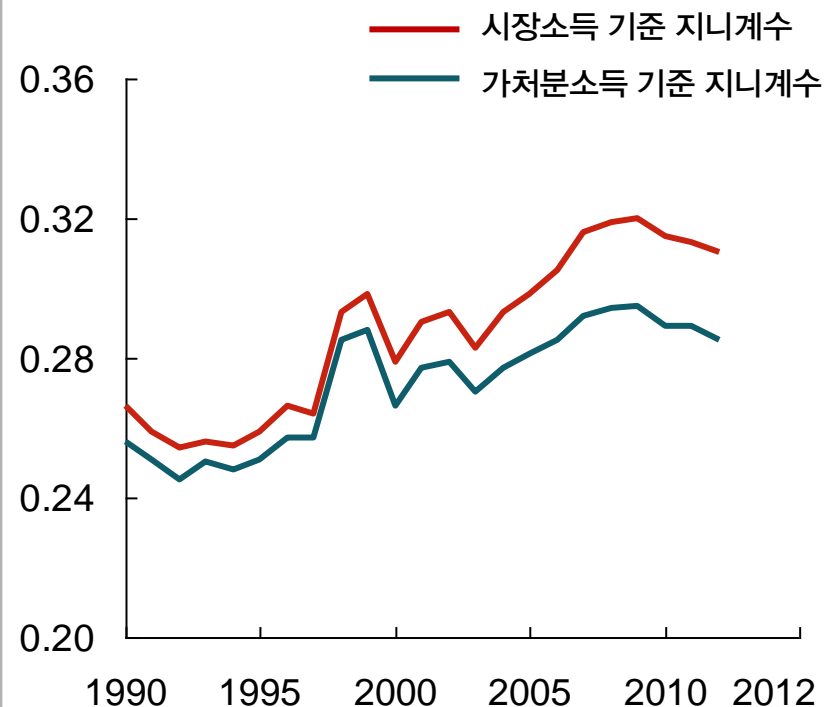
국내 경제는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모두 점진적 악화 추세...

2010년대 이후 3%대 이하의 성장 예상

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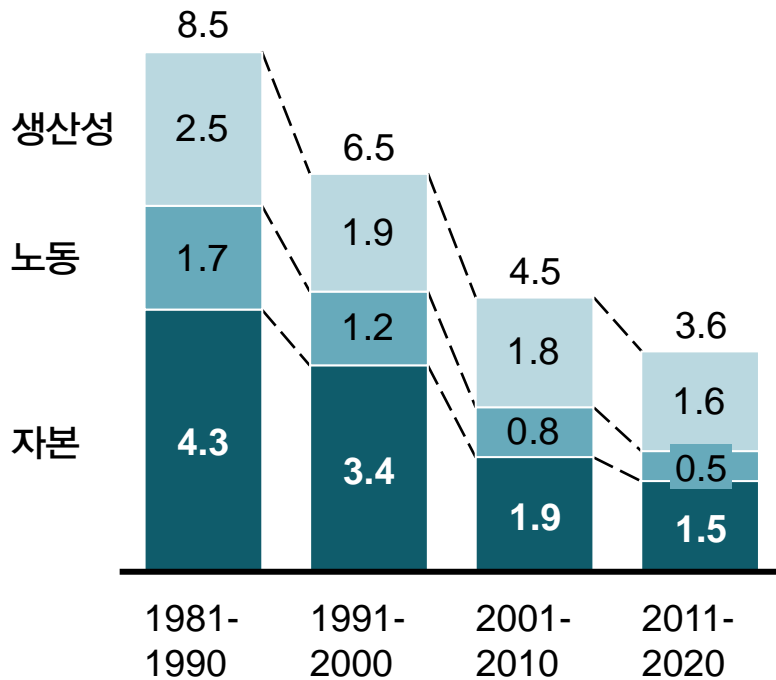
저성장과 함께 분배구조도 악화



구조적 제약요인 1 – 요소투입중심 성장 한계 및 인구구조 고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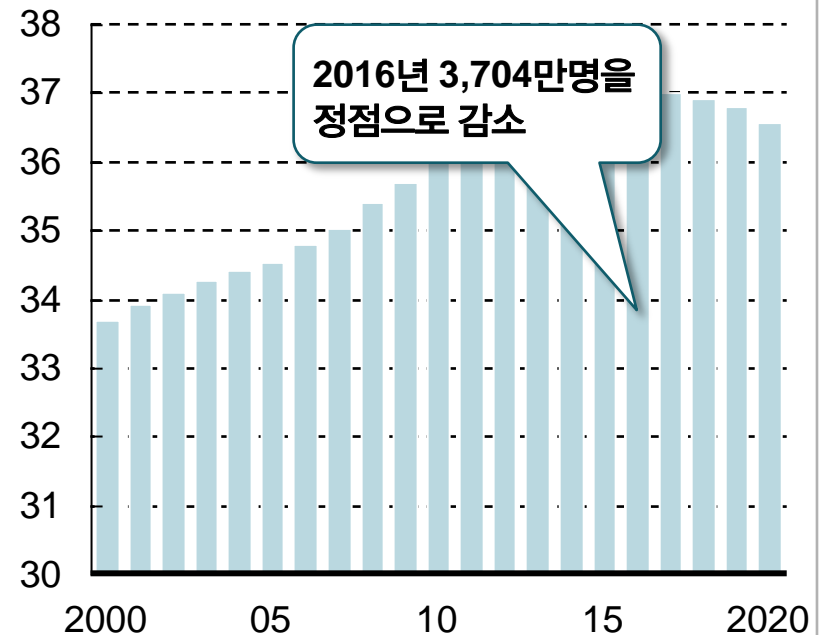
요소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감소

%



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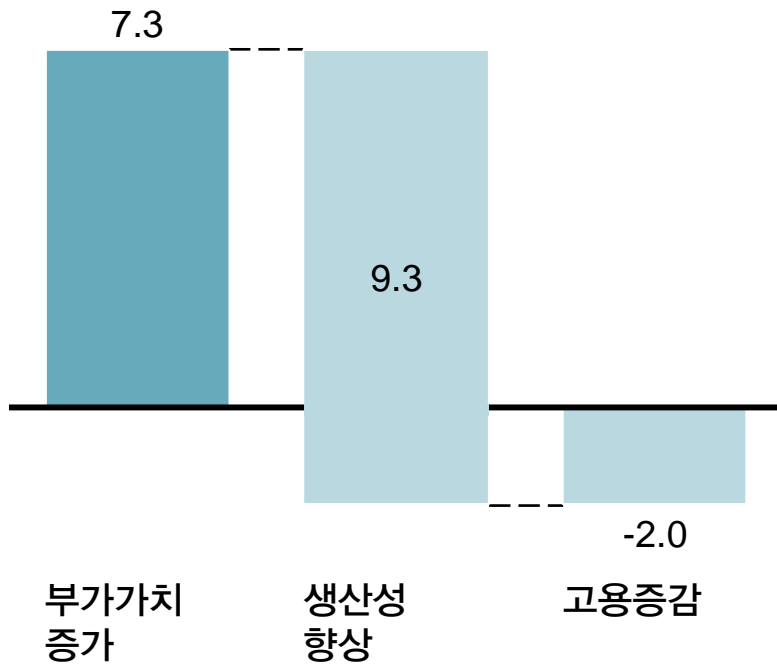
백만명



구조적 제약요인 2 – 대기업 성장의 고용기여 효과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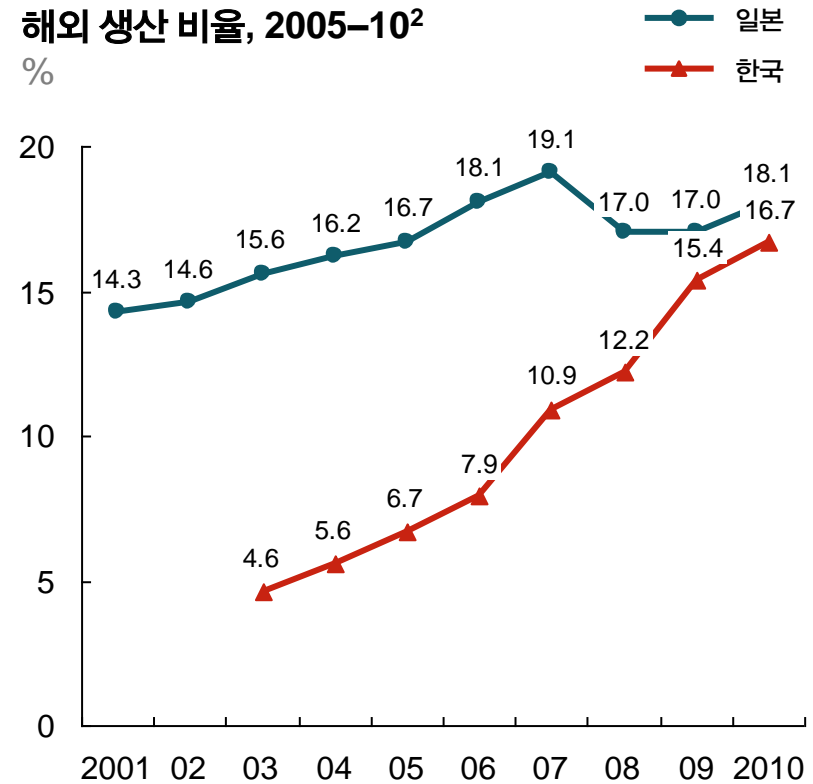
국제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제조업 고용 축소와...

연평균성장률, 제조부문 대기업, 1995-2010¹
%



... 해외 생산 비중의 급격한 증가

해외 생산 비율, 2005-10²
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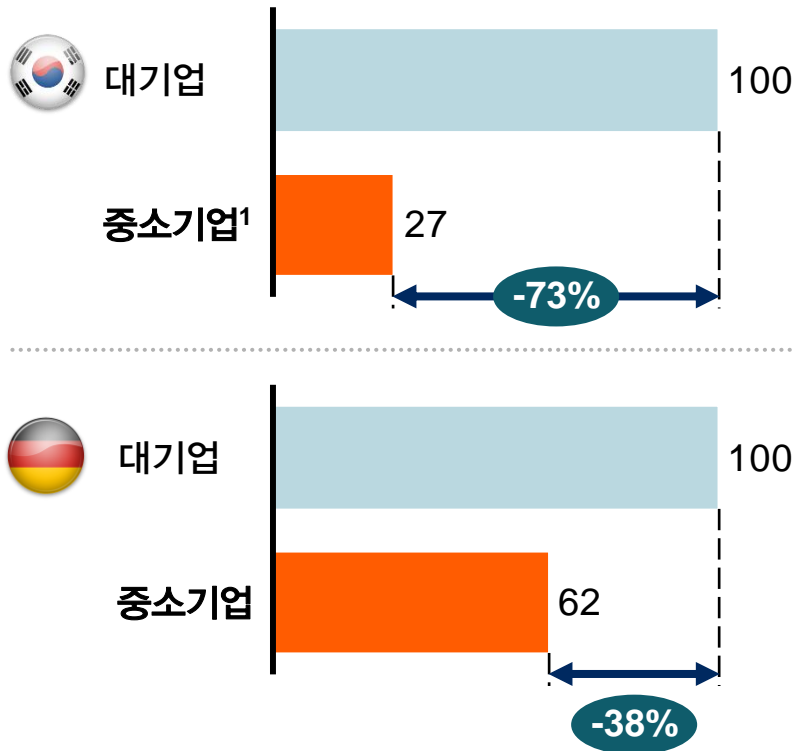


1 광업 및 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종사자 300명 이상의 제조업체들을 기반으로 함.

2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법인 생산 비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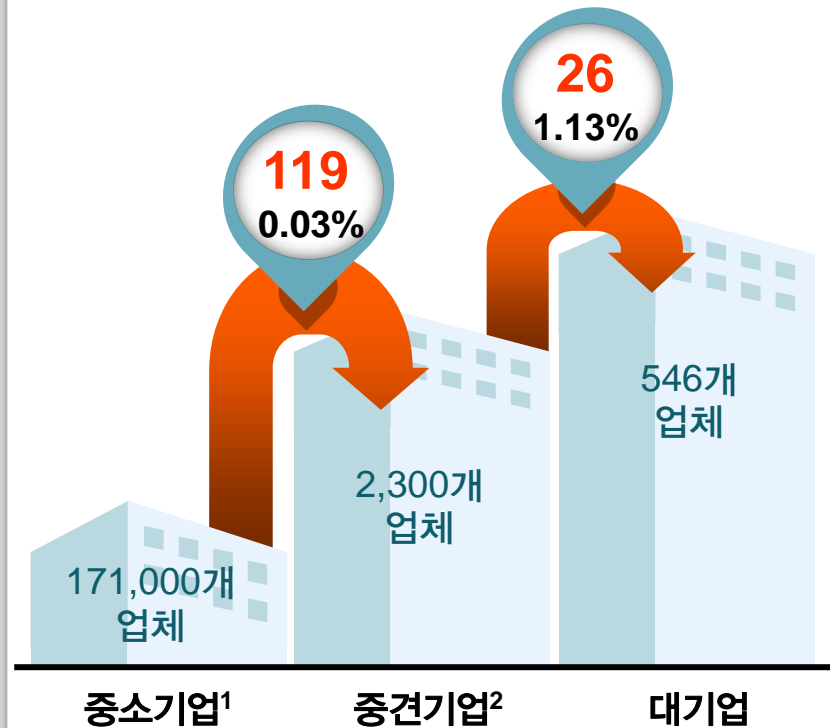
구조적 제약요인 3 –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부진

한국 및 독일의 제조업 부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비교 (직원 당 부가가치, 2010년 기준)



극히 소수의 중소기업만이 중견기업/대기업으로 성장

1997-2007, 사업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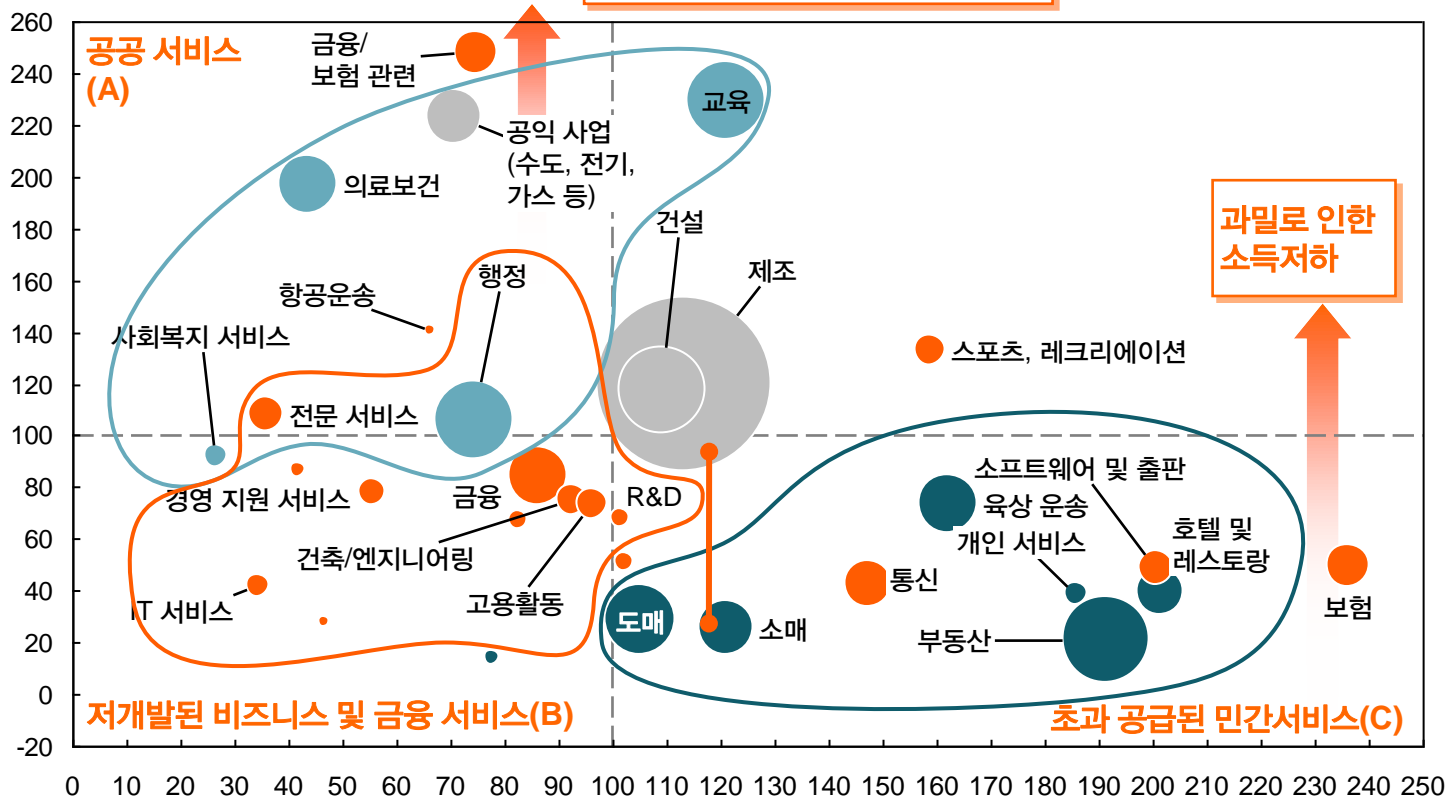
1 종사자 10-299명 규모 2 종사자 300-999명 규모

구조적 제약요인 4 –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 산업 구조

EU 평균 대비 한국의 고용 비율 및 생산성, 2009

생산성

지표: EU 평균¹=100



원의 크기= 2009년 기준 해당 부문 부가가치의 상대적 규모

○ 제조/인프라
 ● 공공 서비스
 ● 비즈니스/금융서비스
 ● 지역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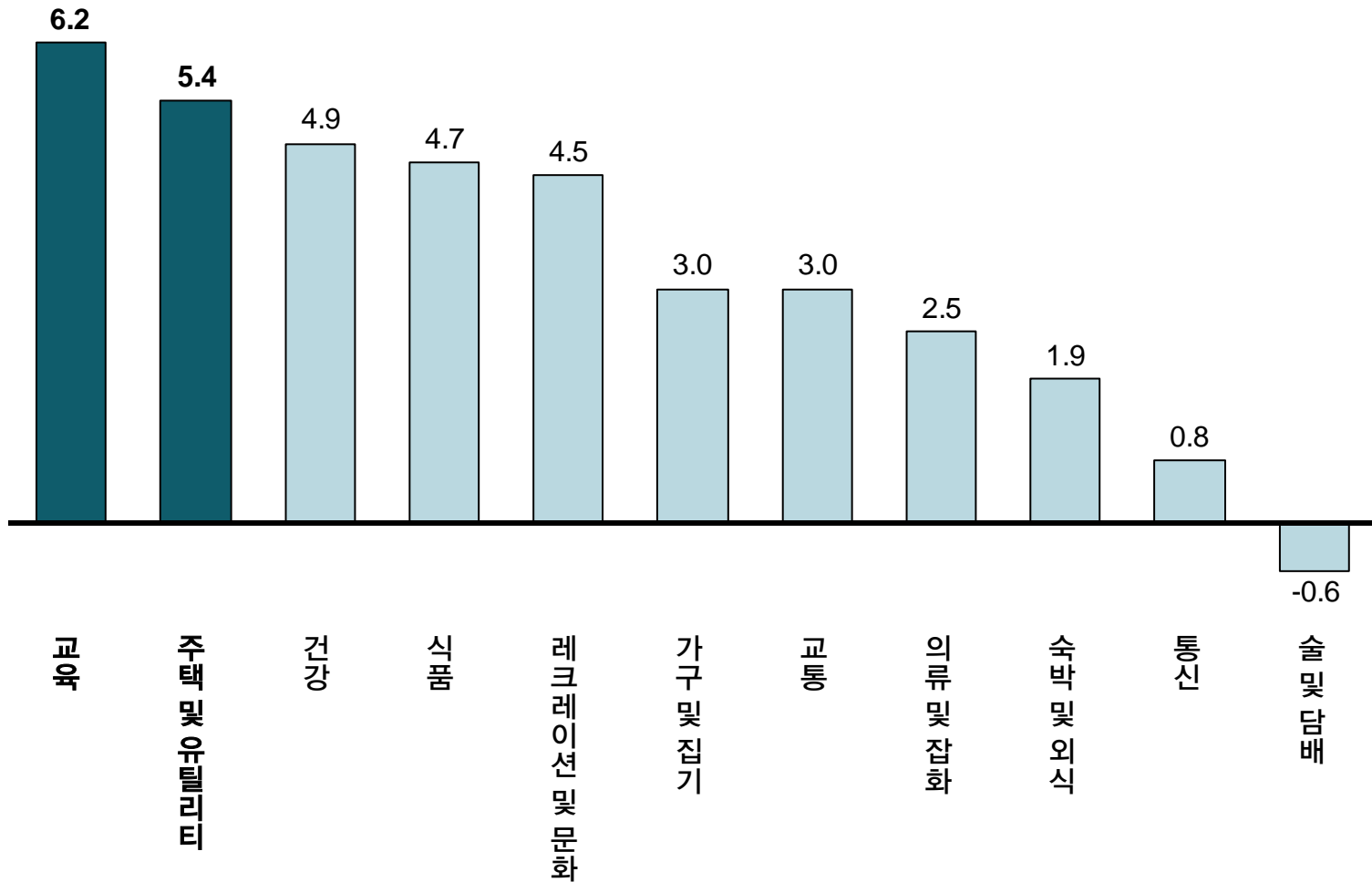
A, B 영역에서 선진국 대비 백만명 이상의 고부가 일자리 창출 부족

1 6개 유럽국가의 평균: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2009년 기준.

고용비율
 지수화: EU 평균¹=100

구조적 제약요인 5 – 가계 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

200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(%)



-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인식

- 향후 정책 과제

-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
- 성장동력 확충
-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
- 정부/공공 부문 혁신

- [참고] 새 정부 출범 후 주요경제정책과 경제 동향

대내외 경제 환경의 시사점

주요 현황 요약

세계 경제

- 세계경제는 회복 추세 진입
- 불확실성 요소는 지속 전망
- 전세계적 성장기회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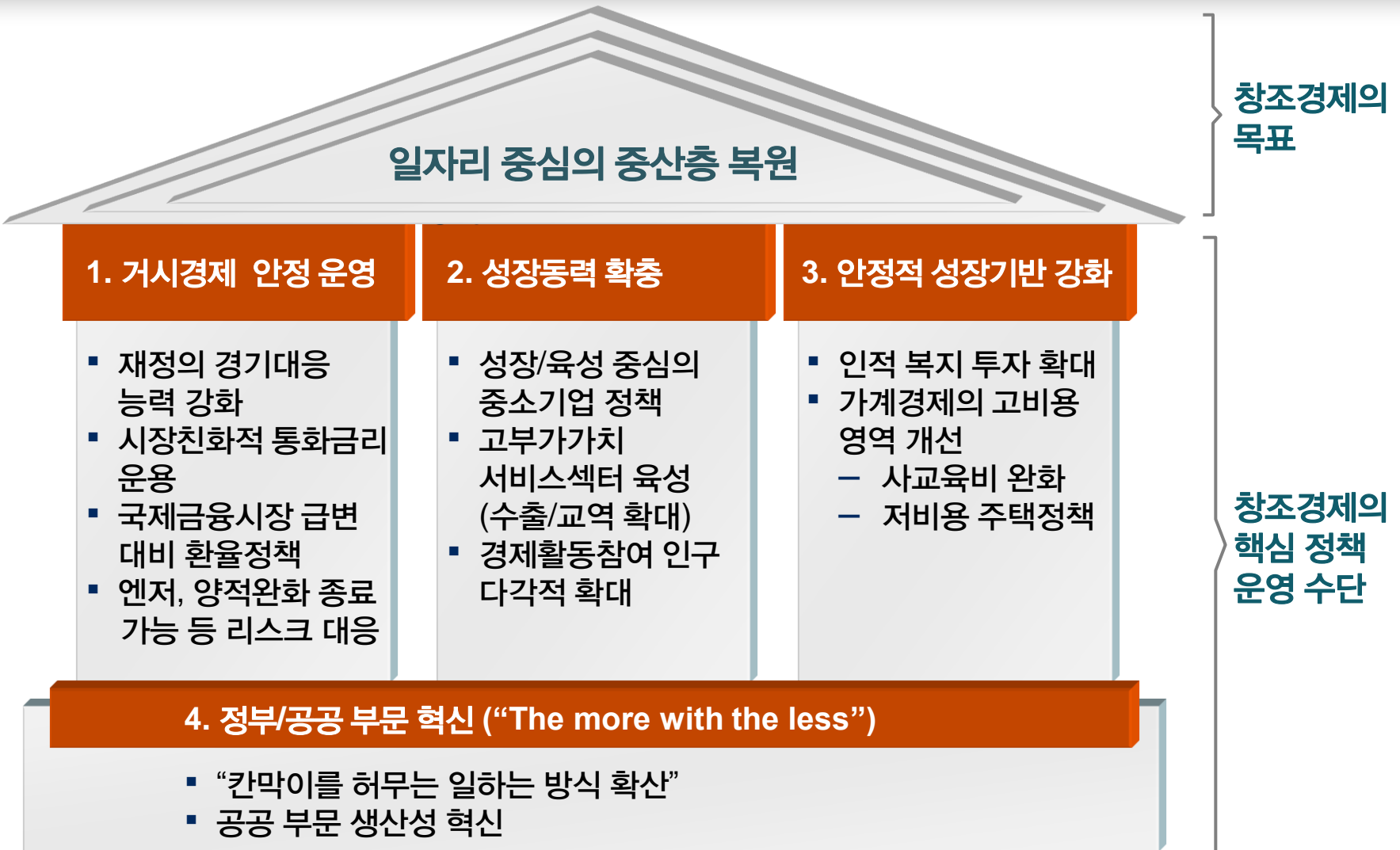
한국 경제

- 성장 및 분배의 악화 추세
- 요소투입 중심 성장한계 및 인구구조 고령화
-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요인
 - 대기업 성장과 국내고용 효과의 약화
 - 중소기업/서비스 부문 생산성 및 경쟁력 취약
 - 가계의 고비용 구조

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

1.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
2.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
3.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
4. 정부 정책 실행 가속화 및 공공부문의 혁신

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구조



1.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

방향성

정책과제

재정

-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
- 중기균형재정 달성
-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구조 효율화

-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화
-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의 재정원칙 확립
- 비과세·감면 축소, 지하경제 양성화, 탈루세액 추징 강화

통화/금리

- 전세계적인 통화/금리정책의 기조 변화(장기침체 탈출에 우선순위)
-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반영 필요 (급격한 외화유출입 관리)

-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 창출 등 거시목표와의 정책 공조

환율

- 급격한 자본유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

-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검토 외국인투자 유입에 맞추어 해외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

대외 리스크 대응

- 엔저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
-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대응

- 급격한 원고 방지를 위한 시장안정조치, 다자협력 등
-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·외채관리 강화

2.1 성장동력 확충 (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)

이전 (From)

향후 (To)

중소기업정책의 핵심 기초

- 중소기업의 지속적 보호
 - 10년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체의 40%
 - 상속재산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상속세 면제

- 중견기업화를 위한 육성에 집중
 - 향후 5년내 중견기업 1,000개 신규 육성 목표 설정
 - 중견기업 육성에 각종 지원 집중 (“중견기업육성청”으로 중소기업청의 기능 전환)

중소기업 역량 강화

- 중소기업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미흡
 - 중소기업의 경우 여건상 사내역량센터 운영 곤란
 - 대학에서 기업 실무 역량을 교육하는 것도 한계 존재

- 세계적 수준의 “중소기업역량센터” 설립 운영
 - R&D, 구매, 해외마케팅, 재무 등 기업 실무 위주 역량 교육
 - 선도대기업들이 상생차원에서 자발적 참여 유도

자금 지원

- 창업단계: 모태펀드 부족
- 육성단계: 만성적 자금지원 고착화

- 모태펀드 확대 및 국제화를 통한 자생적인 VC산업 생태계 창출 (예: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)
-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

중소기업 해외진출

-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미흡

- 해외투자자집단, 우수 벤처와 네트워크 형성 지원, KSP·ODA사업과 연계 강화

2.2 성장동력 확충 (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)

이전 (From)

향후 (To)

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핵심 기초

- 우선순위 육성 영역 불명확
(서비스섹터의 전반적 육성)

- 우선순위 섹터 위주의 성장전략
 - 부가가치, 고용창출력 및 해외수출/투자 기회 고려
 - 예: 보건의료, MICE, 사회복지, 플랫폼엔지니어링, 금융서비스

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실행 방식

- 섹터별 미시적 단위의 육성정책 및 실행체제 미흡

- 우선순위 서비스 섹터별 치밀한 세부육성전략 및 실행조직 가동
 - 1970년대 정부주도 “수출진흥위원회” 수준의 치밀한 전략과 모니터링 필요 (예: 싱가포르의 MICE 조직)

- 서비스업 R&D 투자 미흡
(한국 0.2%, 이스라엘 2.4%)

- 서비스업 R&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비 및 세제지원

규제완화

- 이해관계자들의 규제완화 반대 (기득권 보호)

-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의 선행 제시
- 기득권보호를 위한 진입장벽 유지 중심의 규제 해소

2.3 성장동력 확충 (경제활동인구 확대)

이전 (From)

향후 (To)

여성 인력 (맞벌이 가구)

- 맞벌이 가구 비중 선진국대비 저조 (한국44%, OECD57%)
- 특히, 고소득 여성 인력의 출산 후 원직장 복귀 어려움

-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의 여성인력 고용 유도
 - 파트타임-풀타임 전환의 법적 보호 (출산후 원직장 복귀 확대)
 - 육아휴직/보육시설 지속 확대

중장년

- 최근 정년연장법안 통과 (조기퇴직추세 완화)

- 임금피크제 확대
- 퇴직 지연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

외국 인력

- 생산직 위주의 저소득국가 인력 활용

- 우수유학생, 전문인력의 국내정착 지원 강화 (예: 인력 pool 관리, 영주권 부여 등)

기초생활수급자

- 경제활동참여 유인 부족

- 근로장려세제(EITC)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

3.1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(인적복지 투자 확대)

이전 (From)

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

- 시혜적/사후적 복지

향후 (To)

- 근로와 자립을 지원
 - 근로능력자에 대해 적극적 고용 지원 제공
- 노동, 교육, 건강, 주거 등 관련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적 복지

인적복지 투자 확대

- 저소득층 교육투자 부진
- 양질의 공적 보육서비스 부족 등 계층 상승의 연계고리 약화

- 교육, 보육 등 계층상승의 사다리에 대한 투자 확대
 - 교육: 학업 전념 환경조성
 - 보육: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 확충

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

- 사회보험의 낮은 가입률로 인한 사각지대
 - 사회보험 전달 및 소득 파악체계 연계/통합 미흡

- 저소득층 가입 지도 확대, 사회보험 전달 및 소득파악 체계 재정비
-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(중앙부처·지자체·민간정보 공유)

3.2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(가계경제 고비용 영역 개선)

주택부문 (융자금 상환)

이전 (From)

- 소유 위주의 주택시장
- 가계에 부담이 되는 주택금융
 - LTV에 따른 고이자비용
 - 변동금리주택대출 (향후 금리 인상 시 위험 전가)

향후 (To)

-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정책 확대
- 영국과 같은 Shared ownership 확대 (가구별 여건에 따라 주택 지분을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)
- 주택금융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

사교육비

- 대학입시제도 개편 위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(예: 선행학습 방지)

-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대안적 취업루트 확대
 -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원 확대
 - 기업의 교육에 대한 조기참여 확대 (학교설립, 커리큘럼 설계, 조기취업/준취업, 현장실습 등)

소비자 물가관리

- 소비자물가 추이 모니터링 및 인위적 가격 인상 억제

- 구조적 유통구조 혁신 확대 (예: 석유·LPG·통신 경쟁촉진, 농산물·공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)

4. 정부/공공 부문 혁신 (칸막이를 허무는 일하는 방식 도입)

이전 (From)

추진 조직 체계

- 부처 단위의 추진 조직
- 문제해결 역량 부족
 - 예: 프로세스개선, 구매, 마케팅 등 전문성 부족
 - 이에 따라 문제해결방안의 효과적 도출이 어려움

목표 부여 수준

- 정량적 목표 설정 불명확
 - 정량적 지표 산출 미흡
 - 점진적 수준의 개선 목표

의사 결정 구조

- 통상적 보고체계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
- 정무적/정성적 가치판단에 기반한 논의 중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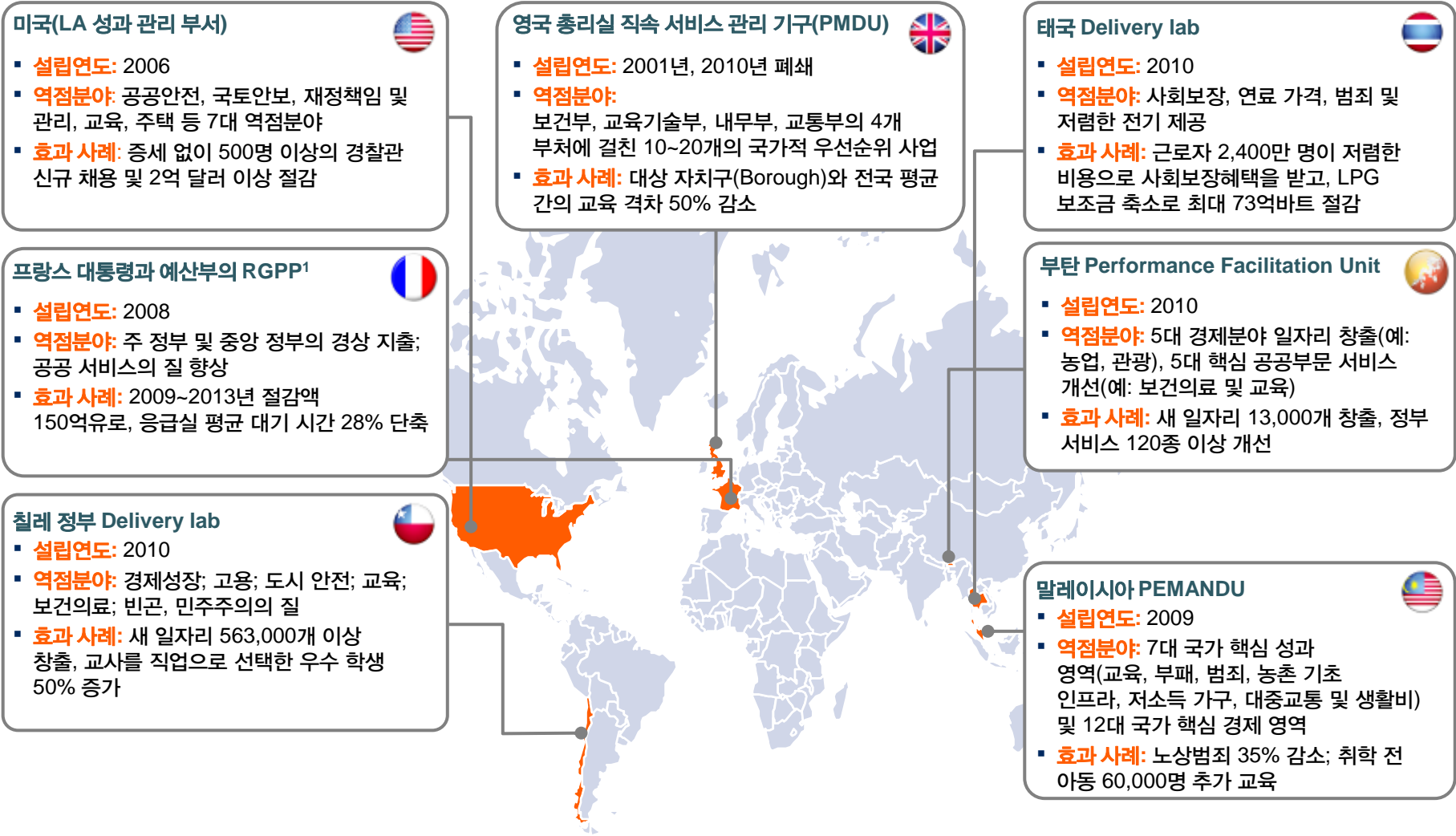
향후 (To)

- 국정과제에 대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 구성
- 전문적 문제해결 역량 투입
 - 문제해결교육 집중 실시 (민간기업 전문가 수준)
 - 필요시 민간 전문가 참여

- 전세계 최고 수준의 벤치마킹 실시를 통한 개선목표 설정
 - 예: 이스라엘 국방부의 국방운영효율 개선 목표
 - 개선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(과정상 실패/실수 용인)

- 청와대(총리실)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 도입 (예: 영국 수상실 직속의 PMDU)
- 정량적 분석 및 사실(fact) 자료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결정 원칙

4. “칸막이를 허무는 일하는 방식 확산” -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공부문의 어려운 과제를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며 신속히 해결하여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



목차

-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인식
 - 세계경제 환경
 -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
- 향후 정책 과제
- [참고] 새 정부 출범 후 주요경제정책과 경제 동향

[참고] 새 정부 출범 후 주요경제정책과 경제 동향

주요 정책 패키지

- 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(4.1일)
- ②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(4.16일)
- ③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(5.1일)
- ④ 수출 중소 · 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 (5.1일)
- 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(5.9일, 2.75→2.5%)
- ⑥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벤처 · 창업 자금 선순환 방안 (5.15일)

추경 편성



- 13년 성장률 0.3%p↑, 14년 0.4%p↑(조세연)

부동산정상화



- 연간 주택거래 전년대비 15.5% 증가 (국토연)
- 주택가격 2.0 ~ 2.2%p ↑ 성장률 0.1%p ↑

투자활성화 등



-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12조원 추가 투자 유발
- 벤처 ·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4.3조원 추가 투자 (자본시장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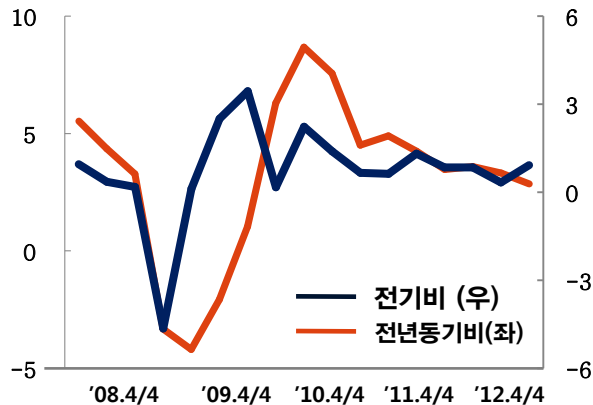
기준금리 인하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민간소비 · 투자 회복시 하반기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

[참고] 새 정부 출범 후 주요경제정책과 경제 동향

한국경제는 1/4 분기에 다소 개선되었으나,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엔화약세 등 하방위험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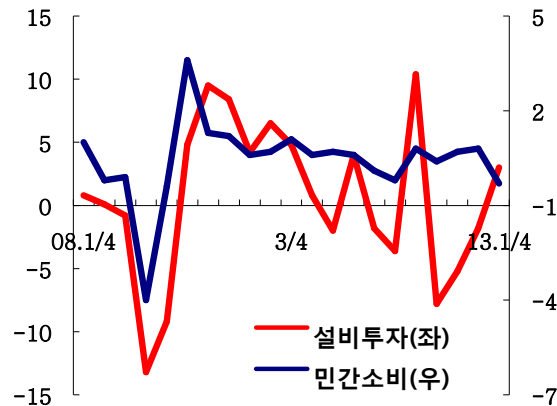
8분기 연속 0%대 성장
단, 1/4분기 성장률 반등

GDP 성장률 추이
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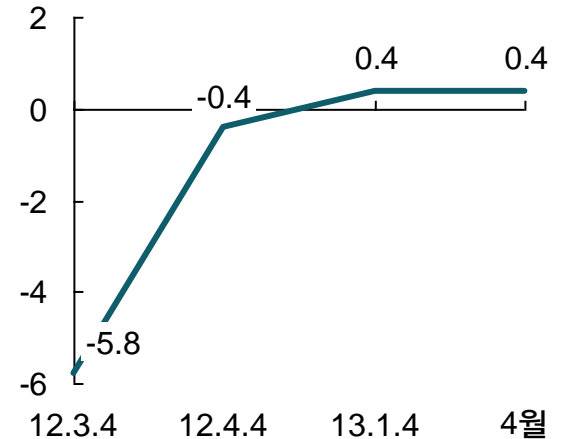
투자는 1/4분기 반등
소비는 감소세로 전환

설비투자, 민간소비
%



글로벌 수요회복 부진, 엔저
등으로 수출개선세 약화

수출
전년동기비 %





감사합니다

토론 주제

1.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 약화의 원인 및 처방
2.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과 우선과제
3. 공정경제의 의미와 핵심과제
4. 대내외 여건변화와 민생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